칼 럼

박 한 주 선병원 국제검진센터 부장

"간암 환자 72%는 B형 간염과 관련"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하면서 고혈압 약만 처방받으러 오는 50세 남자 환자가 있었다.

그는 B형간염 보균자였는데 검진할 때마다 간 기능도 정상이었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다.

다만 간암 고위험군이었기에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그 환자가 비록 바이러스 증식을 하지 않는 비증식 B형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시기이긴 했지만 B형간염 항원을 갖고 있으므로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술도 안 마시고 간 기능도 항상 정상이니 괜찮다고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 것 같다며 외래에 내원했다.

급히 초음파를 해보니 복수가 차 있었다. 간암이었다.

B형간염 바이러스는 간에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는 간염 바이러스 중 하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 체액을 통해 전염되며 산모의 산도, 성접촉, 수혈, 오염된 침습적 기구의 재사용 등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이로 인한 몸의 면역 반응으로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바로 B형간염이라고 하며, B형간염 보균자란 B형간염 바이러스를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갖고 있으나 간으로 인한 자각 증상이 없고, 간기능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요즘에는 B형간염 보균자를 비증식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시기라 말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보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보균자가 되지 않는지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B형간염은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올 때의 나이가 가장 중요하다.

출생 시나 신생아 때 감염된 경우의 90~100%에서, 소년기에는 20~30%에서, 성인에서는 5~10%에서 보균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암은 '침묵의 암'이라 불리며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치료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대한소화기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간암 환자의 72%가 B형간염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으며, 간염 보균자의 경우엔 정상인에 비해 간암 발병 위험이 100배 이상 증가한다.

따라서 B형간염 보균자에겐 정기적인 검사가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균자가 어느 시점에서 간염이 되고 더 상태가 악화돼 간암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고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기 검사는 최소 6개월에 1번 실시하는 것이 좋다.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한 일반적인 간기능 검사로 바이러스의 활동성을 평가하며,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 태아 단백검사로 간암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B형간염 바이러스는 간 기능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 대응 전략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면역 제거기인 활동성 간염 기간에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강력한 항바이러스 약물 치료로 간염 진행을 막을 수 있으며 간경변증, 간암 발생을 억제시켜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간암 스크리닝 검사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부터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2가지 검사(간초음파 검사, 혈청 알파 태아 단백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 B형·C형 간염과 알코올성 간 질환이 있는 간암 고위험군은 1년에 2회, 6개월마다 1번씩 정기적인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를 권한다.

간암 검진 항목에는 간기능 검사가 포함돼있지 않다. 그러므로 B형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간기능 검사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社 說

'고3 유권자' 선거교육 필요하다

오는 4·15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니 기대가 크다.

선거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새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52만~53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고교 3학년생은 5만~6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계획'을 세우고 개학 전까지 교재 및 동영상을 제작해 시·도교육청 및 전국 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교재는 새내기 유권자용과 이들을 지도할 교사용 2가지로 제작된다.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에는 유권자의 의미와 역할, 선거 절차와 방법, 새내기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 올바른 선택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 등이 담긴다.

선관위는 각급 교육청 및 고등학교가 요청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 입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거나 고등학교에서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고등학교 담장 등에 선거 운동용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조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입당 권유 또는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교실 방문 금지 등은 현행 선거법상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새내기 유권자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교육, 현행 법규의 엄정한 집행 및 보완 입법 등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화재 안전지대로 만들려면

날씨가 추워지고 휴가철로 접어드는 화재예방 늦은 가을철이 다가 왔다. 이에 따라 제철 음식이 많아지는 전통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시장은 물품과 정보가 교환되는 고유기능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무료한 삶을 달래주는 소통 기능도 있다. 그래서 시장은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로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쇼핑 공간이다.

그러나 좁은 통로와 출입구, 노후된 시설, 밀집된 점포, 겹겹이 쌓인 가판대 등으로 인해 이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전개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는 1700여개의 크고 작은 전통시장이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수는 77건, 사상자 4명, 103억여원의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전체 화재 발생의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부주의, 원인미상, 기계적 요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주변 가연물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주기적인 자체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즉시 초기 진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통로가 협소하고 주변 장애물이 많으면 소방차가 도착해도 진입하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상인들 스스로가 소화기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지속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무안소방서에서는 전통시장 자위소방대를 구성,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시장 자율소방대를 조직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영업을 종료한 점포들은 귀가하기 전에 전기, 가스 등을 반드시 차단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유사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시장 내 무질서한 좌판이나 적치물을 정비하고 사전에 소방통로를 확보함은 물론 주기적인 화재예방 방송과 야간 자율순찰을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